치안 전망 2019

www.psi.go.kr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POLICE SCIENCE INSTITUTE

발 간 사

「치안전망 2019」를 발간하며

2018년 경찰은 그야말로 커다란 변화와 개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민주 · 민생 · 인권경찰로의 대도약'이라는 치안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간의 경찰 중심의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으로 제도와 인식의 틀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현장 초동조치 · 수사절차 · 집회대응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고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구현되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대학 개혁, 정보경찰 개혁, 보안경찰 개혁 등 이른바 5대 경찰개혁 과제를 추진해 오면서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슬로건이 일선에서 체감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인권중심 수사제도 개편, 공동체 예방치안 정착, 피해자 보호 체계의 내실화는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이버 범죄와 보이스 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SNS 홍보와 지도, 교통 약자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고, 권력형 비리와 갑질 횡포에 엄정하게 대처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 치안정책연구소는 금년 한해 경찰청의 다양한 치안정책 수립 및 추진 과

정에 이론적 근거를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인권중심의 수사구조개혁과 법제 개혁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현장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 사업을 추진하고 치안 R&D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특히 '스마트치안지능센터'를 설립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치안활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등 미래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구소 전 연구관들의 참여 하에 경찰 활동의 주요 분야별 지표를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예측한 결과들을 「치안전망 2019」에 담아 보았습니다. 특히 '2018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하면서 금년 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사건 사고들을 회고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파고를 넘으면서 해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치안전망 2019」가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일선에서 치안활동을 하는데에 작은 참고가 되어,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시는데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치안전망 2019」를 발간하기까지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경찰청 각 국 · 관 담당자들, 자문에 도움을 주신 많은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해마다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관기관 · 학계 · 언론계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망서 집필에 참여한 모든 연구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2019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기원드립니다.

2018.12.31
치안정책연구소장 **하 상 구**

POLICE SCIENCE INSTITUTE

목 차

제1장 2018년 치안활동의 회고

Ⅰ. 치안활동의 회고와 진단 8
Ⅱ. 2018 10대 치안 이슈 16

제2장 치안환경의 변화

Ⅰ. 치안환경 추이 및 전망 36
Ⅱ. 미래치안환경의 변화 41
Ⅲ. 2019년 치안환경의 전망 49

제3장 2019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1절 범죄수사 분야

Ⅰ. 2019년 범죄 발생 전망 52
Ⅱ.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66
Ⅲ. 지능 범죄 전망 78
Ⅳ. 과학수사 발전 전망 89
Ⅴ. 사이버범죄 전망 105

제2절 생활안전 분야

Ⅰ. 112신고 추이와 전망 122
Ⅱ. 젠더폭력 전망 129
Ⅲ. 학교폭력 전망 137

제3절 교통안전 분야

Ⅰ. 교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150
Ⅱ. 교통사고의 진단과 전망 158

제4절 사회안정 분야

Ⅰ. 집회시위 전망 169
Ⅱ. 테러 위협 전망 175

제5절 보안 · 외사 분야

Ⅰ. 대남전략 전망 186
Ⅱ. 탈북민 관련 전망 204
Ⅲ. 외사 분야 전망 216

제4장 경찰의 대응

Ⅰ. 수사 분야 230
Ⅱ. 생활안전 분야 234
Ⅲ. 교통 분야 236
Ⅳ. 사회안정 · 보안 · 외사 분야 239

제1장
2018년 치안활동의 회고

Ⅰ. 치안활동의 회고와 진단 8

Ⅱ. 2018 10대 치안 이슈 16

제1장 2018년 치안활동의 회고

Ⅰ. 치안활동의 회고와 진단

경찰청은 2018년에 '민주·민생·인권경찰로의 대도약'이라는 치안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경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였다.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수사구조개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경찰대학 개혁,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의 개혁을 통해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분야별 주요 정책에서는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공동체 중심 범죄예방활동, 현장경찰관들의 법집행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2018년의 치안활동을 돌아보면, 그동안 경찰에게 꾸준히 제기되었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경찰 본연의 업무를 재정비하여 경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2018년 치안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의 설정과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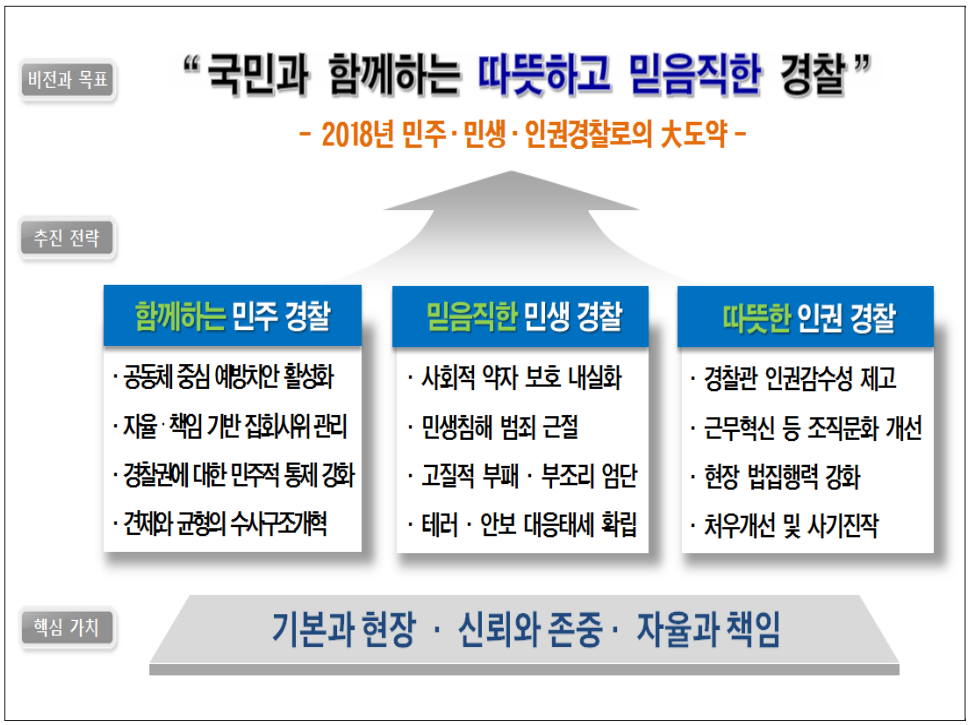
2018년 경찰은 「민주 · 민생 · 인권경찰로의 大도약」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경찰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라는 조직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하는 민주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 따뜻한 인권경찰'을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추진전략 중 '함께하는 민주경찰'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경찰활동의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였던 공동체 예방치안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며,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통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믿음직한 민생경찰'은 여성 ·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상별 위험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생활주변 폭력배 · 사이버 범죄 ·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권력형 비리와 갑질 등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 다짐이다.

'따뜻한 인권경찰'은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의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피해자 보호체계의 내실화, 인권중심 수사제도 개편 등 경찰 인권감수성 제고방안의 함양과 함께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경찰직장협의회의 추진 등 제도적 · 문화적 기반 조성을 의미한다.



출처 : 경찰청, 주요업무 내부문서(2018)

2018년도 경찰의 정책목표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경찰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추진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구성원들에게 한 해의 치안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추진전략들의 이행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는 근무혁신을 위한 불필요한 업무의 정비와 피해자 보호체계의 내실화,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등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공동체 예방치안, 인권중심 수사제도 개편 등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는 반면, 경찰위원회에 의한 경찰통제 강화(경찰법 개정안 국회 계류), 경찰

직장협의회의 추진 등 이행과정이 미진한 사항들도 존재한다.

이번 치안활동의 회고를 통해 치안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2. 5대 경찰개혁과제 지속 추진

2017년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인권 · 수사 · 자치 등 3개 분과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20개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018년 1월에 경찰청은 경찰청(경찰개혁 추진본부)-지방청(관서별 개혁 TF)-경찰서(수사현장 혁신 TF) 단위에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 「자치경찰법」, 「경찰법」 등 제 · 개정에 대한 지원, 경찰개혁 토론회 개최, 안보수사처 신설 및 경찰대학 개혁 등 추가과제에 대한 논의, 권고안 이행상황 점검 등 경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 수사구조개혁 추진경과

수사구조개혁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수사구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총 6건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8년 6월 21일 청와대는 「검 ·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정부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동년 7월 26일 국회는 여 · 야 합의로 입법심사권이 부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후 사개특위라 칭함)'의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동년 11월 8일부터 사개특위가 개최되어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정부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과 검사의 협력관계 규정, 모든 사건에 대한 경찰의 1차 수사권 인정,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분야 한정 및 송치 이후 2차적 수사권 인정, 수사 경합 시 검찰 우선권 인정(단, 강제처분 선 착수 시 경찰 계속수사 가능) 등이며, 기타 사안으로 자치경찰제, 수사상 인권옹호 제도 시행, 일반 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경찰대학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당초 국민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으로 신속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기대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의 정부 조정안에 대한 반론 및 추가적 보완 요구, 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의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시기적으로 많이 지연되었다.

2)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치경찰제도는 2017년 7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경찰개혁위원회는 동년 11월 도입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2018년 4월에 자치분권위원회 내에 구성 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년 11월에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내용
조직 · 인력	• 시 · 도는 '자치경찰본부', 시 · 군 · 구는 '자치경찰대' 신설 • '지구대 · 파출소' 는 자치경찰로 이관 • 국가경찰은 중대 · 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 로 존치 • 2022년에 국가경찰 중 4만 3,000명 자치경찰 이관
인사 · 신분	• 자치경찰 신분은 시 · 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 •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 · 도 경찰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 · 도지사가 임명 •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 · 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 · 훈련 등 지원
사무배분	•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 여청 · 교통 ·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 학교폭력 · 가정폭력 · 교통사고 · 음주운전 ·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 담당 • 국가경찰은 정보 · 보안 · 외사 및 수사, 전국적 ·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 담당
정치적 중립장치	• 시 · 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 · 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관리 ※ 시 · 도경찰위원 5명은 시 · 도지사가 임명(시 · 도지사 1명 지명, 시 · 도의회 2명 (여 · 야 각 1명) · 법원 1명 · 국가경찰위 1명 추천) • 시 · 도별로 '경찰위원회' 설치
재정지원	•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 을 원칙 ※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 검토
시설 및 장비운영	• 국가경찰의 시설 · 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사용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2018년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통해 2019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의 실시를 준비하는 한 해였다.

3) 경찰대학 개혁방안

경찰대학 개혁은 2018년 2월 「경찰대학 개혁 소위원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동년

6월에 경찰개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이 의결되었고, 동년 11월에는 경찰청이 개혁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찰대학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문호 개방 및 입직 경로의 다양화	① 신입생 인원 축소 및 일반대학생 · 현직 경찰관 편입학 제도 도입 – 2021학년부터 고졸 신입생 50명으로 축소 – 2023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 3학년으로 편입, 졸업 시 경위로 임용 ② 입학 연령 등 제한 완화 – 입학 연령은 현행 '21세 미만' 에서 '만 41세(편입학 43세) 이하' 로 조정 – 2020년도 신입생부터 성별 제한비율 폐지, 남녀 통합모집 실시 ③ 현직경찰 Fast-Track 개설 및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 –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개설, 과정 이수자는 승진 최저소요연수 경과 시 경위까지 자동 승진시키는 Fast-Track으로 활용 – 치안대학원을 통해 빅데이터 · 사이버 · 치안 R&D 등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 ④ 중간입직자(간부후보 · 변호사경력채용) 교육과정 경찰대학으로 통합
제복 입은 시민상에 맞는 경찰 양성	① 졸업학점 감축, 학생 선택권 증대 등 커리큘럼 개편 – 졸업학점을 130~140점으로 감축 – 인권 · 성인지 교육 강화 – 인문소양 · 토론중심 교육 강화 ② 군대식 · 사관학교식 생활지도 교육 전향적 개선 – 의무합숙 및 제복착용 폐지 ③ 각종 특혜 폐지 또는 축소 – 경찰대학생 군 전환복무 제도 폐지 – 학비 · 기숙사비 전액지원 폐지 – 엄격한 학사관리로 졸업 · 임용 요건 강화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① 대학장 개방직 직위 전환 및 임기제 도입 ② 교수 중심 교수부 운영, 전임교수 역할 강화 ③ 경찰대학의 인사 · 예산 · 교육 측면에서 독립성 강화

위와 같은 경찰대학 개혁 추진을 위해 「경찰대학 설치법」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이 진행 중이며, 2018년은 본격적인 경찰대학 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정보경찰 개혁방안

경찰청은 2018년 1월 정보경찰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 개혁에 관한 권고안이 의결되면서 '개혁과제 이행 TF'를 구성하여 권고안을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경찰 개혁의 필요성 및 핵심 내용은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한 정보활동이며,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시민의 관점을 고려한 업무범위와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와 형사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국회 협력관'을 폐지하여 국회 및 정당에 대한 정보경찰의 상시 출입을 중단하였다.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을 통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과 조사 요구권을 명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위원회에 감사 및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고, 외부개방직인 감사관실의 사무감사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투명한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정보활동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2018년 10월 전국에 확대 도입하여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의 중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보경찰 조직재설계 방안은 정보경찰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해 정보경찰 직무방향에 따른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추진이다. 또한 정보분실을 폐지하고 집회신고 업무는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정보경찰의 업무와 활동은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족과 경찰활동의 정치화라는 비판의 중심에 있었으나, 2018년 이를 개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정보경찰 개혁의 출발이 국민을 위한 경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5) 보안경찰 개혁방안

경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6월 8일 '보안경찰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경찰청은 시민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대상에 맞는 보안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한 보안경찰 개혁과제를 추진하였다.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은 보안수사 적정성에 대한 대내외 통제 강화를 위해 '안보사건 평가위원회' 및 '(가칭)안보수사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안보사건 평가위원회'는 안보관련 장기 내사사건 및 국보법 위반사건의 입건여부를 심사하고 평가하며, '(가칭)안보수사심의회'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보안수사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에는 6개월 이상의 내사는 원칙적으로 종결하여 불필요한 장기내사를 근절하기 위한 '내사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적표현물 감정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적표현물 감정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보안경찰의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수사관의 직무역량 관리를 위한 상시 역량평가를 제도화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역량 강화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보안경찰 양성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하였다.

2018년은 지난 73년 경찰역사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추구하는 경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였다. 이를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3. 분야별 회고

1)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

경찰청은 2018년 8월 23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수사와 대응을 총괄하는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여 각 기능별로 추진하던 여성과 관련된 치안정책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의 여경 수사관 비율을 32%에서 51.7%로 확대하였다. 또한 동년 8월에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경찰청에 설치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년 9월에는 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개발하여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성폭력에 대한 현장역량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유포행위 감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및 차단, 여성가족부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 공동체 중심 범죄예방활동 강화

경찰청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을 확대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집중 신고기간과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 부족과 취약시간 및 장소 등 취약요인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순찰활동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이 미진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많았다. 그러므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운영과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범죄취약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17개소,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2개소, 여성가족부의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사업' 17개, 지방자치단체의 CCTV와 비상벨 설치 사업 1,032개 등을 함께 추진하였다.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는 환경개선 사업에서 경찰의 역할과 참여 범위, 기관 간 협력의무 등에 대한 관련 근거 및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범죄예방진단팀(CPO)의 인력, 예산,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장 법집행 지원 강화

2018년에는 현장경찰관들의 법집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법집행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 민·형사소송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으로 현장경찰관들은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 사기저하, 소극적인 법집행에 내몰리고, 국민의 신뢰는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경찰관을 위한 365일 법률 자문 제공, 소송비용의 지원, 재산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로 손실보상 범위의 확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시행되었거나 관련 법률 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 법집행의 지원 강화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향후 자치경찰의 시행과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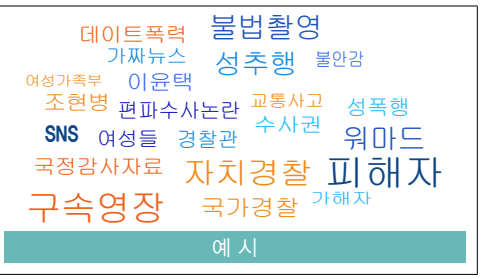
이밖에 2018년에 추진된 주요 치안정책은 건전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현장활력의 강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그램의 지속 추진,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의 확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한 경찰청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Ⅱ. 2018 10대 치안 이슈[1)]

2018년에도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였다. 연초부터 문화계에서 불기 시작한 페미니즘 열풍은 이후 미투 운동 및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또한 2017년부터 이어진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및 광주 집단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논란 등 경찰로서는 많은 도전에 직면했던 한 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는 새로운 경찰상 정립 하에 경찰청 산하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설립하여 여성·약자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을 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많은 제도적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이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2018년도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10대 치안이슈를 선정하여 사건개요, 전개과정, 파급효과 등을 소개하였다.

10대 치안이슈 선정은 국내 중앙지 및 방송사 빅카인즈 뉴스 키워드 연관어 분석 결과(검색어: 경찰, 치안, 안전, 범죄)를 반영하였으며, 수록 순서는 각 사건이 발생한 사건 순서를 따랐다.



예 시

1. 미투 운동 확산

미투 운동은 SNS에 '미투(#MeToo : 나도 당했다)'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을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으로,[2)] 2017년 10월 미국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해시태그 운동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안 24시간 만에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리트윗하며 미투 운동을 지지했으며, 8만여 명의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폭로하였다. 기네스 펠트로, 안젤리나 졸리 등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들도 미투 운동에 가세함에 따라 미투 운동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1) 「치안전망 2019」에서는 한 해 동안 가장 이슈가 되었던 주요 치안 사건을 선정하여 이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살펴보았다. 10대 치안 이슈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치안 관련 사건들을 수집하여 16개의 후보 사건들을 정하였다. 치안전망의 집필진들이 후보 사건들 중 중요성이 높은 사건들을 복수로 선택한 다음, 선택 빈도가 높은 10순위까지의 이슈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29일 서○○ 검사가 안○○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또한 작년 발표된 최○○ 시인의 시 '괴물'이 고○ 시인의 성추행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 검사의 폭로와 함께 국내 미투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 이후 연극연출가 이○○의 성추행에 대한 고발이 SNS상에서 널리 퍼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고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극작가, 영화감독, 배우 등 문화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정계에서도 미투 폭로가 잇따르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미투 운동으로 알려진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의미의 '위드유(#WithYou : 당신과 함께하겠다)' 해시태그(#)를 다는 위드유 운동도 확산되었다.

미투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자,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3)]

범국가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대책에 발맞추어,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휘체계 격상, 신고 접수체계 및 모니터링 강화, 미투 사건 엄정 수사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 상 2차 피해 방지, 가해자 보복방지 및 차단, 피해사실 노출 방지, 그리고 피해자 사후 지원을 약속하였다.

3월에도 각계각층으로 미투 운동이 이어졌고,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극단의 대표 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다. 배우 조○○는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앞둔 3월 9일 오후 자택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또한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감독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미투 운동을 통해 재판에

3) "文대통령 미투운동지지 '젠더 폭력 발본색원한다는 생각, 수단 총동원' 당부", 서울경제, 2018. 2. 27.

넘겨진 가해자 중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되었다. 반면 김ㅇㅇ 전 정무비서의 폭로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안ㅇㅇ 전 충남지사는 8월 14일 진행된 1심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최근 미투 운동은 교육계 미투인 '스쿨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경찰은 지난 9월 여학생을 성희롱하거나 강제 추행하여 논란이 된 청주 모 고교 교사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11월에는 10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는 제목의 집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기성 여성단체가 주관한 '학생의 날 맞이 스쿨 미투 집회'와 함께 서울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2. 광주 집단폭행 대응 논란

2018년 4월 광주에서 집단폭행이 벌어질 당시 출동한 경찰이 초기 현장대응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공권력 강화를 위한 논의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30일 오전 6시 18분경 음주 후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A(33세)와 A의 일행은, 역시 음주를 한 가해자 B(31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A의 일행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먼저 나와 택시를 잡았는데, B의 일행이 택시를 가로채 함께 있던 여성을 먼저 태운 것이 싸움의 발단이었다. 결국 먼저 택시를 잡았던 A의 일행은 B의 무리에게 집단폭행을 당했고, 뒤늦게 나온 A가 이 장면을 목격 한 후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B의 일행이 모두 달려들어 A에게 집단폭행을 가했다.

B의 일행은 피해자 A를 도로변 건너편 풀숲에 쓰러뜨린 뒤, 큰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며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도 했다. 피해자 A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와골절로 인한 실명 위기에 처했고, 수술 후에도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다. 또한 피해자 A의 일행 중 한 명은 목과 팔에 깁스를 했고, 다른 한 명은 앞니 두 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체포된 가해자들은 대부분 폭력 · 상해 등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으며, 전과 10범인 가해자도 있었다. B의 일행 중 일부가 문신을 하고 있어 조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해자 A의 형도 가해자들이 '관광파'라는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명단에 없는 조직이라며, 초기에는 가해자들을

조직폭력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폭행의 영상과 피해자의 처참한 사진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가해자에게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하여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3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였다.[4] 또한 집단 폭행이 벌어질 당시 처음 도착한 소수의 경찰이 인원부족 및 상황판단 등을 이유로 가해자 진압에 소극적이었다며, 당시 경찰의 미흡한 현장 대응 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경찰이 초기에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접수했다가 집단폭행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경찰청은 청와대 답변을 통하여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에 서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경찰관이 즉시 제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비춰졌다."며, "앞으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대응력강화와 동시에 법 ·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와 함께, 발생 초기부터 형사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 불법촬영으로 촉발된 젠더이슈

2018년은 카메라 등 영상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 해였다. 5월 '유명 유튜버 비공개 촬영', 9월 '인기 연예인 숙소 몰카' 사건이 각각 발생하였고, 같은 달 유명가수 및 방송인이 전 연인 및 남편으로부터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5월에 발생한 홍대 불법촬영 사건은 여성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이 일며 남녀 간 젠더이슈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섹스가 생물학적 의미의 성이라면, 젠더는 성에 대한 영문표기로서 사회적인 의미의 성을 뜻한다. 따라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젠더 이슈는 우리사회에 오래전부터

4) "(한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 해주셔야 할 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 국민청원 및 제안, 청와대, 2018. 6. 1.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녀 간 사회적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반기의 목소리를 말한다.

'성차별'이라며 젠더 논란을 일으킨 홍대 불법촬영 사건은 2018년 5월 1일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여성 모델 A(25세)가 휴게 공간 사용 문제로 다툰 남성 모델 B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여성 혐오에 반대하는 사이트)에 올렸고, A는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A는 2018년 8월 13일 1심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실형(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인데도 실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어서 편파수사 및 사법 불평등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같은 날 부산지법은 사귀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일베게시판에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그와 같은 논란은 더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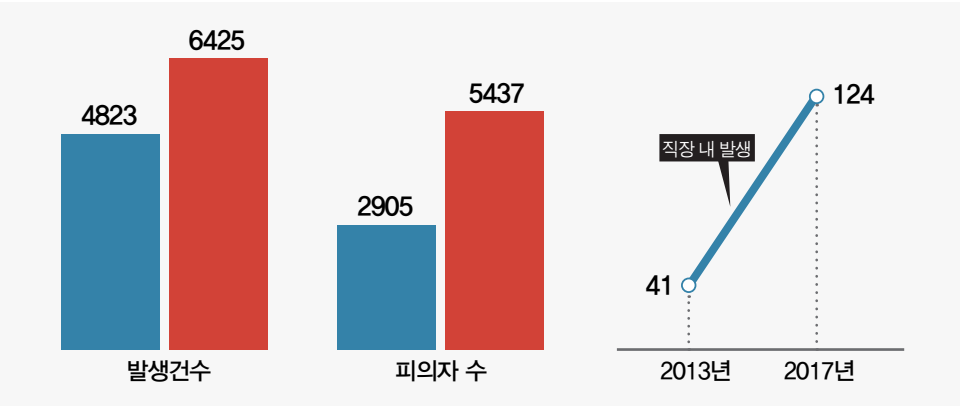
이를 계기로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여성 시위가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시작돼 2018년 8월 4일까지 4차례 열리는 등 홍대 불법촬영 사건은 남녀 간 젠더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집회에서 여성들은 홍대 불법촬영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며 수사기관을 규탄하였다.[5]

한편 몰카 범죄는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34%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몰카 범죄로 인한 피의자 수는 2,905명에서 지난해 5,437명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체 피의자 수는 1만 6,802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97%는 남성이었다.[6]

5) "홍대 몰카범 징역형... 또다시 불붙는 젠더갈등", 세계일보, 2018. 8. 13.
6) "몰카 판치는 사회…불법촬영 · 유통 성범죄 증가세", 머니투데이, 2018. 10. 26.

[그림 1-2-1] 몰카 범죄 증가 추세

(단위 : 건, 명)



출처 : 머니투데이(2017)

이렇듯 불법촬영 · 유포 등 특히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져감에 따라, 경찰은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몰카 범죄에 대해 100일간 특별단속(2018. 8. 13 ~ 11. 20)을 벌였고, 그 결과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3,847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6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경찰청(생활안전국)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 운영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신설 및 현장의 여성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여 여성대상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 본격논의

2018년은 민주적 형사사법제도 구현을 위한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경찰개혁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한 해였다.

2017년부터 이어져오던 수사구조개혁 논의는 2018년에 더욱 본격화되었다. 2018년 1월 14일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7]」을 발표하여 검 · 경 수사권조정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2월 8일에는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8]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7)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문, 2018. 1. 14.

8) 법무 · 검찰개혁위 권고안 "警에 대한 檢 수사지휘권 해지해야", 파이낸셜 뉴스, 2018. 2. 8.

3월 20일 발표된 청와대 개헌안[9]에서는 영장신청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사항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수사구조개혁 진행과정에 발맞추어, 경찰청은 4월 및 5월에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구조개혁 쟁점과 관련된 의견수렴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8년 6월 21일 정부는「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정부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조정 합의문은 그동안의 경찰과 검찰의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인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 검사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불송치 시 사건기록 등본 통지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논란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7월 2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여·야 합의로 사개특위에 입법 심사권을 부여함에 따라 수사구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형사소송법」,「경찰청법」,「검찰청법」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월에 사개특위 구성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 관련 정부 조정안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조문화에 관한 의견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중요한 치안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도 도입 또한 중요한 이슈였다. 2018년 11월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2019년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22년부터는 현재 국가경찰 중 약 4만 3,000명(전체 경찰의 약 36%)이 자치경찰로 전환될 예정이다.

발표된 도입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각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와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되고,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는 사무배

9) 조국 민정수석,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3. 20.

분에 따라 재편될 예정이다. 정보 · 보안 · 외사 및 수사, 전국적 ·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었다. 자치경찰 도입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협조 문제, 민생치안 관련부서 근무 경찰관들의 지방공무원 신분전환 문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예산차이가 있는 자치단체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및 경찰관 근무여건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5. 위협받는 현장공무원 안전

2018년은 경찰관 대상 범죄 등 경찰관 및 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한 해였다. 7월에 현장출동 경찰관이 정신병력(조현병)을 지닌 40대 남성에 의하여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8월에는 면사무소 공무원의 피살, 10월에는 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 사망 등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먼저, 2018년 7월 8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습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주택가에서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경위(53세)와 B경위(50세)가 출동한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였다. 경찰관들은 C(42세)의 난동을 막기 위해 집안으로 진입해 흥분한 C를 달래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C가 휘두른 흉기에 A경위는 목이 찔려 사망하였고, B경위는 머리와 복부 등을 다쳤다.[10] 피의자의 모친은 피의자는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관련사건 출동 시, 안전을 위해 장비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현장 경찰관 안전대책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11]

8월에는 면사무소 공무원의 순직 사건이 발생하였다. 8월 21일 오전 9시 31분경

10) "암전했던 아들, 군 복무 후 난폭해져" 조현병이 가져온 비극, 중앙일보, 2018. 7. 11.
11) 경찰청장 폴넷 당부사항, 2018. 10. 22.

경북 봉화 소천면사무소에 주민 A(77세)가 들어가 직원들에게 총을 발사하였고,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12] 면사무소 민원행정 6급인 B(47세)는 가슴명치와 왼쪽 어깨에 총을 맞아 심 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가슴에 총상을 입은 다른 직원 8급 C(38세)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A는 이날 앞서 오전 9시 15분 봉화군 소천면 임기역 인근 사찰에서 주민인 지인 D(48세)에게도 엽총을 쏴 어깨에 총상을 입혔다. 다행히도 D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A가 처음 총을 쏜 현장인 사찰과 소천면사무소는 3.8km 거리로 A는 1차 범행 후 자신의 차로 면사무소까지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A는 면사무소에서 총을 난사한 직후 민원인과 직원 등에 의하여 제압된 후 경찰에 넘겨졌는데, A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파출소에서 유해 조수 구제용으로 엽총을 출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는 피해자 D와 상수도 관리문제로 평소 갈등이 있어왔으며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민간에서 엽총으로 일어난 총기사건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평소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국내에서 그런 갈등이 총기 사건으로까지 번진 것은 이례적이라 더욱 그 파장이 컸다. 이에 일각에서는 엽총과 같은 총기류 규제를 더 강화하고, 엽총 반출시 이용 목적과 기한을 더 구체적으로 묻는 등 총기 소지 자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자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7월에 이어 10월에 또다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8년 10월 1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A경사(34세)가 2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13] 이날 오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 출동한 A경사는 갓길에 있던 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경위를 확인한 후, 정지선 앞에 서있던 포터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베라크루즈 SUV 차량을 운전하던 B(25세)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12) "경북 봉화 면사무소 총기사건 부상 공무원 2명 사망", 연합뉴스, 2018. 8. 21.
13) "교통사고 처리하던 경찰관 2차 사고로 사망", 경향신문, 2018. 10. 19.

2차 사고를 막기 위하여 교통사고 현장 조사 시 필요한 안전조치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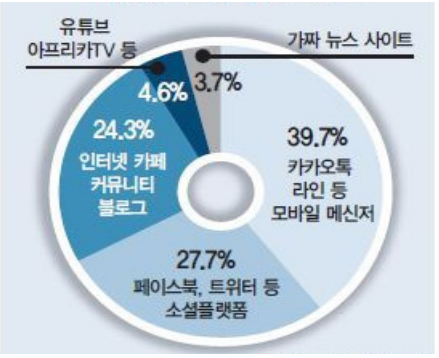
6. 가짜뉴스의 확산과 강력한 대응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를 포함한 '가짜뉴스'가 2017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도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가짜뉴스는 국내에서 2017년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으며, 2018년 유튜브,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다수 유포되었다.

가짜뉴스의 대상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정치, 환경,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를 포함해 국가 안보까지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과거에는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주로 증권가 소식지나 사설 정보지였다면, 일반인도 정보를 쉽게 유통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인 지금은 누구든지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50대 성인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2017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40% 정도가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접한 경로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7%가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접했으며, 27.7%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플랫폼이라고 응답했고, 24.3%가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블로그라고 말했다.[14]

[그림 1-2-2] 인터넷 서비스 중 가짜뉴스를 받아본 경로



출처 : 머니투데이(2017)

14) 오세욱 · 정세훈 · 박아란,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116~122쪽.

2018년 국내에서 널리 퍼진 주요 가짜뉴스 중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베트남 주석 장례식에 참석해 '북한 김씨 왕조를 찬양한다.'는 글을 남겼다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15] 또한 환경 분야 가짜뉴스 중 '태양광 괴담'에 관해서는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라는 비상식적인 내용이 검증 없이 유통되었다.

2018년 10월 정부가 가짜뉴스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래 경찰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단속에 집중하면서, 관련 제보 접수와 분석을 담당하는 팀을 보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 55건을 단속하고 19건은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짜뉴스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세밀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6] 또한, 우리 사회가 미디어 정보 독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각종 미디어 정보를 주체성을 갖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유명 온라인 사이트 버즈피드(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저속한 용어로 비난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버즈피드가 조작한 것으로 이른바 딥 페이크(deep fake)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표정, 입술의 움직임, 몸의 제스처까지 실제 인물의 것과 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작된 동영상은 앞으로 등장할 가짜뉴스의 수준이 지금까지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일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동영상 편집기술을 이용한 '딥 페이크' 가짜뉴스가 유포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7. '윤창호법'으로 이어진 음주운전 처벌강화

2018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했으나,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도 별다른 제도적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희생된 고 윤창호(22세)의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15) "가짜뉴스와 극우보수논객 유튜브 채널의 '콜라보', 왜 인기 있을까?", 세계일보, 2018. 10. 20.
16)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기승..처벌사례 아직 없다?", 뉴스핌, 2018. 6. 7.

9월 25일 새벽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이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20대 청년 두 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인 고 윤창호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48일 만에 숨졌다. 당시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1%였다.

고 윤창호는 대학 재학 중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현역 군인으로, 군 전역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었다. 고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였고, 해당 국민청원은 총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17]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이며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18]

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검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며 "상습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가)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 윤창호의 친구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윤창호법'의 도입을 제안했다.[19]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음주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0]

이에 바른 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0월 21일 고 윤창호의 친구들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104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2018년도 회기 내 법 개정

17)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및 제안, 청와대, 2018. 11. 1.
18) "문 대통령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 아시아경제, 2018. 10. 10.
19) "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 없었으면...' 윤창호씨, 끝내 하늘로", 서울신문, 2018. 11. 11.
20) '윤창호법' 발의안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형량을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기준을 3회 위반 시에서 2회 위반 시로, 음주 수치 기준을 최저 0.05%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3%이상~최고 0.13%이상으로 변경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시 살인죄 적용을 골자로 한다.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모 의원은 10월 31일 저녁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 의원은 불과 열흘 전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법 개정을 호소했던, '윤창호법'을 발의한 당사자여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국회는 11월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하지만 당초 원안인 '징역 5년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법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8.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온라인 마녀사냥[2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마녀사냥, 신상 털기 등 소셜미디어의 익명성으로 인한 허위정보의 유포, 공유 및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SNS 계정,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의 무차별적인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일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사건	일시	내용
김포 보육교사 사망사건	2018. 10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던 경기 김포시 보육교사, 한 맘카페에 실명과 사진이 유포되자 스스로 목숨 끊음
광주 맘카페 난폭운전 사건	2018. 7	경기 지역 맘카페에 '모 태권도 학원 통학차량이 아이들을 태운 채 난폭운전을 했다.' 는 글이 올라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글 내용 거짓임
240번 버스 사건	2017. 9	"애가 승객에 떠밀려 내렸으니 뒷문 열어달라" 는 보호자 요구를 버스기사가 무시하고 보호자에게 욕했다는 내용 퍼짐.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남
바늘학대 어린이집 사건	2015. 2	경기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바늘로 찔러 학대했다는 보도에 해당 어린이집 실명이 인터넷에 떠돌아. 대법원은 보육교사 무죄 확정
채선당 사건	2012. 2	모 맘카페 회원이 '채선당 직원이 임신 6개월인 내 배를 걷어찼다.' 는 글을 올려 불매운동이 일어남. 경찰 조사 결과 배를 걷어차인 것은 종업원

출처 : 매일경제(2018)

21) "보육교사 투신에 역풍 맞은 맘카페…마녀사냥 논란", 동아일보, 2018. 10. 17.

2018년 발생한 대표적 온라인 마녀사냥 사례로는 '김포 어린이집 사건'이 있다. 10월 온라인 '맘카페'의 유언비어로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사건은 맘카페 회원 A가 "어린이집 나들이 행사 때 4세 아이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달려가 안겼더니, 교사가 아이를 밀쳐 흙바닥에 나뒹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후 A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인천과 김포의 한 온라인 맘카페에 A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고, A의 신상 및 실명, 사진이 공개되자 A는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 직후, 집단 여론몰이와 마녀사냥 등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하였다. 청원 내용은 개인 신상을 유포해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으로 개인의 비난을 방지하는 '마녀 사냥 금지법'에 대한 입법 요청부터, 전국의 맘카페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다양했다. 맘카페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등 인터넷 커뮤니티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SNS 상 파급력이 크고 거짓정보가 진실로 둔갑하는 마녀사냥에까지 이르는 단점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2]

9. 사립유치원 보조금 회계 비리

2018년 하반기 국고보조를 받는 어린이집 운영·회계 관련 비리가 크게 보도되었다. 사립유치원 운영·회계 비리 문제는 2018년에야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이미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묵인해온 '담합'의 결과라고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밝혔다.[23] 국회 교육위원 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비리의 유형도 다양하다. 정부 지원금으로 성인용품, 명품 외제차를 구입하고, 호화 쇼핑과 해외여행비로 지불한 경우도 있었으며, 유치원 설립자 부친이나 배우자에게 매월 급여로 1,000만원씩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2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1,878개 유치원에서 정부 지원금 유용 비리가 적발되었다. 정부는 2018년 기준 전국 사립 유치

22) "'김포맘카페' 사건에 靑 청원 '들썩' … '마녀사냥 금지법 필요', '맘카페 폐쇄해야'", 동아일보, 2018. 10. 17.
23) "[TF기획-사립유치원 파문 왜?〈상〉] 오랜 문제 방치, '늑장 대응' 이 화를 키웠다", 더팩트, 2018. 10. 31.
24) "사립유치원 비리 방치한 당국도 책임", 충청일보, 2018. 10. 29.

원 4,282곳에 국민 혈세로 연간 2조 원의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 1곳당 연평균 4억 6,000만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자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달리 시설 투자에 막대한 개인 돈이 투입된다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및 국회가 자신들을 '비리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국회 토론회마저 실력 행사로 무산시켰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을 신설할 때 비영리 교육시설인 '학교'로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건물 및 부지에 관한 면세 혜택을 누리는데, 그 규모가 한 해 최대 4천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보고 국가가 이를 책임질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 수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1천 개를 추가 확보하고, '국공립 취원율 40% 목표 시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도 유치원 회계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전면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교육계는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을 두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였다.[25] 경찰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부패, 공익 침해 집중신고 기간(2018. 10. 15 ~ 2019. 1. 14)을 설정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 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에 관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26]

10.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의자 김ㅇㅇ(29세)가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A(20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오전 3시 30분 피의자의 동생 B(27세)가 PC방을 찾았고, 3시간 뒤 7시 33분에 PC방에 들어온 피의자가 아르바이트 직원 A에게 테이블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직원 A가 테이블을 제대로 치우지 않자, 피의자는 PC방 계산대 앞에서 A와 말

25) "아이들 마음 멍들게 한 사립유치원", 아하!한겨레, 2018. 11. 5~11. 14, vol. 552.
26)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부패, 공익 침해 집중신고 안내", 경찰청 홈페이지, 2018. 10. 17.

다툼을 벌였다. 오전 7시 38분 동생 B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4분 뒤 피해자 A도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7시 43분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중재 후 15분 뒤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동생 B는 PC방 입구 앞에서 주위를 살폈고, 피의자는 PC방에서 300m 떨어진 집으로 뛰어가 등산용 칼을 가져왔다. 경찰이 떠난 뒤, 직원 A가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오자 피의자는 A를 향해 주먹으로 가격한 뒤 넘어진 A의 얼굴을 칼로 30회 이상 찔렀다. 8시 13분 시민들이 잇달아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2분 만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었다. 현장에서 쓰러진 A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만인 오전 11시경 사망하였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 A에게 이전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는데, 빨리 치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그를 구속 수사하고, CCTV를 확보한 뒤 동생 B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풀어주었다. 10월 17일 사건 당일 CCTV가 공개된 후, 동생 B가 피해자 A의 팔을 붙잡고 있는 듯한 장면이 있어 동생 B의 범행 가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B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피의자의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피해자 담당의였던 남궁인 교수가 19일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참혹했던 당시 모습을 묘사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27] 국민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동의한 사람의 수가 8만 명을 돌파했으며, 10월 26일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청원 역대 최다 동의 수를 기록하였다.[28]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자,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

27) "[전문] 남궁인 '내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담당의… 우울증 주장은' ", 국제신문, 2018. 10. 20.
28)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청와대, 2018. 11. 16.

한편, 11월 20일 정신감정결과 피의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은 동생 B의 공범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폭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은 행위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발표하였다.

제2장
치안환경의 변화

Ⅰ. 치안환경 추이 및 전망 36

Ⅱ. 미래치안환경의 변화 41

Ⅲ. 2019년 치안환경 전망 49

제2장 치안환경의 변화

Ⅰ. 치안환경 추이 및 전망

1. 치안환경 변화요인

치안환경의 변화는 사회 · 기술 · 경제 · 환경 ·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치안환경을 둘러싼 변화요인들은 직 · 간접적으로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치안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외부환경 변화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EP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STEEP분석방법은 미래예측이나 트렌드 분석에 흔히 쓰이는 질적 연구로써 Social(사회적), Technical(기술적), Economical(경제적), Environmental(환경적), Political(정치적)의 첫 글자를 딴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기법이다[29)]

STEEP 분석기법에 따른 지난 3년간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에서 다룬 치안환경 변화요인은 다음과 같다(〈표 2-1-1〉 참조).

29) Bensoussan, B. E., & Fleisher, C. S., Analysis Without Paralysis : 12 Tools to Make better StrategicDecisions, Pearson Education, 2013, p.187.

〈표 2-1-1〉 치안환경 분석비교

구분	치안전망 2016	치안전망 2017	치안전망 2018	공통이슈
사회	· 고령화 · 1인 가구 증가 · 여성 사회진출 · 다문화 증가 · 해외여행 증가 ·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체류외국인 증가	· 사회양극화 심화 · 다문화 확산 · 가족해체와 공동체 붕괴 가속화 · 세대 간 갈등 · 고령인구 증가 · 낮아진 사회이동성 · 사회문화 위기	· 고령인구 증가 · 1인 가구 비중 증가 · 부정적인 인식 확대 · 다문화 확산 · 세대 간 갈등 확산 · 경쟁적 교육환경과 인성교육 부재	· 인구구조 및 가구형태 변화 · 세대 간 갈등 · 사회문화 위기
기술	· 모바일 환경 · 금융보안 · 사물인터넷	–	· 사이버공간 확대 · 랜섬웨어의 위험	· 사이버 범죄의 다양화 및 급증
경제	· 경제회복 둔화 · 실업률 · 빈부격차	· 세계경제 상황개선 · 국내경제성장 둔화 · 높은 실업률 · 빈부격차 심화	· 실업률 감소 · 양극화 정체	· 실업률 · 양극화
환경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복합재난	· 복합재난
정치	· 세계 안보정세 · 동북아 정세	· 세계 안보정세 · 동북아 정세	· 북한의 위험	· 불안정한 안보정세

3년간의 치안전망 변화요인에 관한 공통이슈를 통해 2019 치안전망을 추론하면 첫째, 사회분야에서는 2019년에도 여전히 인구구조 및 가구형태의 변화가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인구와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의 증가가 주요 치안이슈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 가구 비중의 증가로 인한 가구형태의 변화 역시 관련 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치안환경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계층구조나 이념 대립 등으로 인한 갈등 역시 2019년의 주요 이슈로 보인다.

둘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확대는 신종범죄의 양산뿐만 아니라 관련 피해 정도를 더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 분야에서는 2018년 전망한 실업률 감소와 양극화 정체 전망과는 달리 2019년에는 실업률 감소와 양극화 심화는 치안환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2018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위력을 바탕으로 더 이상 한국사회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환경 분야에서는 여전히 자연재해는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재 · 붕괴 · 교통사고 · 환경오염 등의 사회재난 발생 역시 치안환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올 한해는 오염 가속화에 따른 환경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난민문제와 같은 세계적으로 공통의 문제 역시 국내 치안 분야의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전망 2019」에서는 STEEP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와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분야를 치안환경 변화 요인으로 제시할 것이며, 도식화하면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1-1] 치안환경 요인

2. 2018년 사회적 이슈와 치안환경

2018년에 발생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젠더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단언컨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MeToo)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미투운동은 SNS 상에서 '나도 고발한다' 혹은 '나도 동조한다'라는 의미의 'MeToo'에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이 겪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유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이다.

이는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유색인종이나 소외계층의 성범죄 피해 여성들 사이에서 펼친 '공감을 통한 권한 부여(empowerment through empathy)'라는 시민사회 운동의 일환에서 비롯됐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후 10년 뒤인 2017년 미국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범죄 사실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Alyssa Milano)가 'MeToo'에 해시태그를 달아 고발하는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30]

국내에서도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으로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가 퍼져나가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8년 발생한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은 SNS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고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후 문학계와 연극계를 넘어 각계각층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었다.

〈표 2-1-2〉 국내 미투운동 대표적 사례

구분	내용
문화예술계	• 문단 미투(시인 고○○) • 연희극단 미투(연출가 이○○) • 온라인 커뮤니티 미투(배우 조○○) • 영화 및 드라마 미투(영화감독 김○○과 영화배우 조○○) • 방송계 미투(방송인 김○○)
정치계	• 정치인 대상 미투(도지사 안○○, 정치인 정○○ 등)
교육계	• 여대생, 대학생 미투 • 여중생, 여고생 미투
종교계	• 종교계 미투(이○○ 목사 등)

한편, 일각에서는 미투운동에 대한 부작용으로 '젠더갈등', '현대판 마녀사냥' 등을 염려하면서 미국 부통령 펜스(Pence)의 말을 인용하여 직장 내 여성과의 접촉을 피해 오해받을 상황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30) 김가은 · 엄유진 · 권기성 · 김연수, "직장인의 미투운동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3호, 2018, 38쪽.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투운동은 점차적으로 성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몰래 카메라)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31]에 올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사건발생 12일 만에 검거되었다. 하지만 기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들과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은 검거된 가해자가 포토라인에 서고, 빠르게 검거되었다는 점, 그리고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한 편파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곧 혜화역 편파수사 시위를 촉발하게 되며, 성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톱스타 前남친의 불법촬영 논란, 곰탕집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여전히 첨예한 성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밖에도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경 이수역 근방 한 주점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 사이에 시비와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혐오' 주장과 '남성혐오' 주장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성적갈등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여전히 누가 먼저 무단촬영을 하였는가, 물리력행사의 시작이 누구인가 등의 논란이 일고 있으며, 현재 양측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처럼 성대결양상은 점차 과열되고 있으며, 소위 '여혐'과 '남혐'이라는 성 대결적 사건은 2019년에도 증가일로(增加一路)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한 시위 역시 점차 더 대규모화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젠더사건을 수사할 경찰의 역할은 더 중요할 전망이다.

31) 생물학적 여성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 남녀평등을 표방하고 있으나 최근 남성혐오적 글들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Ⅱ. 미래치안환경의 변화

1. 갑질과 분노의 사회

최근 대중에 공개된 녹취파일에는 한 여성이 "미리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어우 짜증나."와 같은 음성이 담겨져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오른 조○○ 대한항공 전무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업무상황에서 이 정도로 분노를 내보인 건 권력구조에 기반한 '갑질'일 뿐만 아니라 충동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의 증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32]

울산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매장에서 음식이 주문과 다르게 나왔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식을 집어던진 김○○(49)씨가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씨는 음식세트를 주문했는데 단품이 나와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33]

이보다 앞서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의 갑질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영상 속 양 회장은 한 남성에게 폭언을 내뱉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직원으로 추정되는 영상 속 피해 남성은 무릎을 꿇기까지 했으나 양 회장의 폭언과 폭행은 계속 이어졌다.

위 사례처럼 2018년에도 여전히 갑질은 주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갑질 문제는 2019년에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폭력 문제'는 날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이전 손님이 놓고 간 담배꽁초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도 치워져 있지 않자 게임비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시비 끝에 가해자 김○○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면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김○○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비를 돌려받지 못해 억울하고 분했다."며 "나만 바보됐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 죽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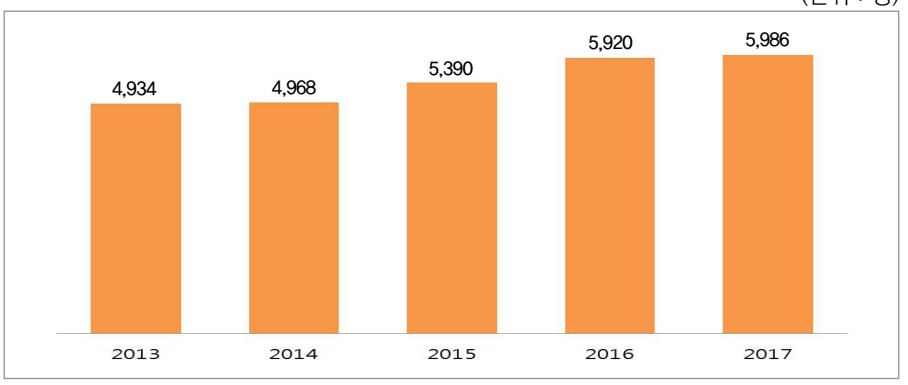
32) "툭하면 '욱' ....분노조절장애 환자 연 6,000명", 세계일보, 2018. 4. 17.
33) "맥도날드, 양진호...한국은 지금 갑질공화국", 아시아경제, 2018. 11. 19.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34]

평범해 보이던 사람도 '욱'하면 괴물로 돌변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다 못해 범죄로 이어지는 이른바 '분노범죄'의 심각성이다. 2015년 4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우리나라 성인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분노 · 우울 · 불안 등으로 불행하다고 답했다. 그중 42%는 스스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증상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11%는 실제 분노조절장애가 의심되었다. 또한, 충동을 이기지 못해 병원을 찾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습관 및 충동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 2013년 4,934명에서 2017년 5,986명으로 4년 만에 21%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2-1]참조).[35]

[그림 2-2-1] 습관 및 충동장애(분노조절장애) 진료인원

(단위 : 명)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미수 포함) 914건 가운데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357건(39.1%)으로 집계됐다. 분노의 원인이 되는 '현실불만'에 의한 살인(44건)까지 포함하면 401건(43.9%)이 분노에 의해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분노에 따른 살인이 하루 1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36]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2019년에도 여전히 분노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4) "살인사건 10건 중 4건은 홧김에… '묻지마→분노범죄'", 이데일리, 2018. 10. 25.
35) "〔시사픽업〕 분노사회, '괴물' 이 익숙해졌다", 시사저널, 2018. 11. 13.
36) "'분노 공화국' … 순간 욱해서 살인 年400건", 서울신문, 2018. 10. 22.

2. 데이터 기술(DT) 시대

2018년 5월 20일,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시에서 열린 중화권 인기 스타 장쉐여우(張學友)의 콘서트에서 약 3년 간 도피행각을 일삼던 한 남성이 출입구를 통과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공안에 체포됐다. 중국 일대에서 열린 장쉐여우의 콘서트장에서 잇따라 수배범들을 검거했는데,[37] 이는 콘서트장 출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수배범의 얼굴을 인식한 덕이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은 공안부 주도로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얼굴을 몇 초 안에 90%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의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 '톈왕(天網)'은 2천만대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범죄 용의자를 추적한다. 이 톈왕은 지난 2년 동안 2천 명이 넘는 범죄자를 검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38]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과거 제조업은 전기에 의존했지만 미래 제조업은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하며, "IT(정보기술) 시대가 가고 DT(데이터기술)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도래기인 지금, 데이터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다. 2016년 3월에 있었던 알파고(인공지능 프로그램) 대 이세돌 간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잘 짜인 알고리즘의 영향도 크지만 그간 알파고가 수집했던 바둑대전들의 정보처리 능력도 큰 역할을 했다.[39]

2013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코건 교수는 페이스북에 성격검사 앱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앱을 사용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친구를 맺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약 5,0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코건 교수는 해당 데이터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무단 공유하였다. 이 CA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선거운동에 이용했다는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업체다.[40]

이렇듯 데이터의 힘은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과 SKT는 MOU를 맺고 '스마트폰 불법복제' 여부를 실시간 검출하는 시스템을 개발

37) "中 톱스타 콘서트장에 안면인식 카메라…수배범 꼭 집어 검거", 중앙일보, 2018. 7. 25.
38)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9, 미래의 창, 2018. 317쪽.
39) 유성민,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에 미친 영향", 「한국정보기술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6, 32쪽.
40)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문 닫는다… '파산 절차 시작'", 뉴시스, 2018. 5. 3.

하였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실시간 검출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매월 발생하는 약 500만 개의 스마트폰 정보 및 사용패턴 등의 데이터를 서버와 연동 · 분석, 불법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별하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범죄예방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41]

국경 없는 온라인 데이터의 특성상 기업이나 개인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는 현재의 규제방안은 2019년에도 여전히 화두가 될 전망이며, 치안환경에서 데이터의 활용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3. '고용없는 성장'의 고착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9년 세계경제는 수요 · 생산 · 고용이 선순환하는 힘이 점차 둔화되면서 2018년 성장률 전망치인 3.7%보다 0.2%p 낮은 3.5% 성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의 경제성장률 역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률에 있어서는 연구원 별로 전망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과는 달리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에서는 고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치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두 연구원의 2019 경제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라거나 유지, 내지는 경기효과와 인구영향이 맞물리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2018년 9월 16일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42]는 작년 한해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으로 확인되었다. 올해는 1분기에 0.252로, 2분기 0.132, 3분기 0.032로 2009년 4분기 0.022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41) "SKT, 빅데이터로 범죄 막는다… '스마트폰 불법복제' 여부 실시간 검출", 문화저널21, 2017. 9. 7.

42) 고용탄성치는 산업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성장에 따른취업자 증가 수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록했다.[43] 이러한 흐름을 내다볼 때, 2019년도 역시 고용탄성치는 반등하기 보다는 낮거나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경제분야의 최대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낮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의 상승에 관한 전망도 있어 이러한 측면과 결부된 고용문제나 생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증대, 그로 인한 분노형 범죄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2〉 국내 2019년 경제전망

구분	주요내용
한국은행 (2018. 10)	• 경제성장률 : 2.7%('18) → 2.7%('19) • 소비자물가 : 1.6%('18) → 1.7%('19) • 고용률 : 60.7%('18) → 60.7%('19) • 실업률 : 3.8('18) → 3.8('19)
현대경제연구원 (2018. 9)	• 경제성장률 : 2.8%('18) → 2.6%('19) • 소비자물가 : 1.5%('18) →1.7%('19) • 실업률 : 3.8%('18) → 3.8%('19) • 취업자수 증감(만 명) : 9.6('18) → 12.5('19)
LG경제연구원 (2018. 9)	• 경제성장률 : 2.8%('18) → 2.5%('19) • 소비자물가 : 1.5%('18) → 1.4%('19) • 실업률 : 3.8('18) → 3.9('19) • 취업자수 증가(만 명) : 10('18) → 12('19)
한국개발연구원 (2018. 11)	• 경제성장률 : 2.7%('18) → 2.6%('19) • 소비자물가 : 1.7%('18) → 1.6%('19) • 실업률 : 3.7%('18) → 3.7%('19) • 취업자수 증가폭 :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4. 필(必)환경 시대[44]와 환경범죄

2018년 4월, 수도권 일대에서 일부 재활용 업체들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됐다. 때 아닌 중국발(發)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셈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쓰레기 수입국이었다. 2016년 한 해에만 재활용 쓰레기 730만 톤을 수입했으며, 가공하거나 열병합 발전 원료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의 불법소각과 매립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중국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43) "한국 3분기 고용탄성치 0.032, 9년만에 최저치", Moneys, 2018. 11. 13.
44) 환경보호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2017년 2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서 국내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되었다.[45]

이를 계기로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고 처리할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환경부에서 제공한 환경부와 지자체 단속 환경범죄 위반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2-3〉). 이러한 흐름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배출량 50% 감축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대책 중의 하나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일회용 컵 사용규제이다.

〈표 2-2-3〉 환경범죄 위반현황

(단위: 사업장 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단속	79,819	83,002	73,855	71,679	72,015	78,287
	위반 (위반율%)	5,800 (7.3)	7,068 (8.5)	7,852 (10.6)	7,518 (10.5)	7,098 (9.9)	7,522 (9.6)
환경부 (환경감시단)	단속	7,870	8,943	8,449	7,594	5,589	4,635
	위반 (위반율%)	1,717 (21.8)	2,375 (26.5)	2,442 (28.9)	2,128 (28.0)	1,694 (30.3)	1,522 (32.8)
지자체	단속	71,949	74,059	65,406	64,085	66,426	73,652
	위반 (위반율%)	4,083 (5.7)	4,693 (6.3)	5,410 (8.3)	5,390 (8.4)	5,404 (8.1)	6,000 (8.2)

출처 : 환경부(2017)

또한, 정부의 환경사범 단속 기능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발의되었다. 하지만 일부 정부부처와 여당의 반발로 현재까지 계류되어 온 이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는데, 환경범죄 수사를 총괄할 환경감시위원회의 신설이다. 이 위원회는 일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수사한 환경범죄 정보를 보고받아 시정명령 · 과징금 조치 등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46]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범죄에 관한 단속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45) "재활용쓰레기와 호모 사피엔스", 울산제일일보, 2019. 9. 26.
46) "환경감시좇 출범 예고…불안한 中企", 매일경제, 2018. 8. 22.

전 세계적으로 프리사이클링(precycling)과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운동이 확산되면서 환경보호는 하면 좋은 '친환경'이 아닌 생존을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하는 '필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던 환경범죄에 관한 관심의 정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47] 이러한 추세와 결부하여 치안영역은 환경 분야까지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5. 난민과 치안문제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발행하는 소식지 '글로벌 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난민이 3,000만 명을 넘었다고 보고했다. UNHCR이 직접 관리하는 난민은 2,540만 명이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사업기구(UNRWQ)가 관리 및 대행하는 난민 580만 명을 합치면 대략 3,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등록 · 미등록 난민과 망명 신청자, 거주지에서 쫓겨나 국내를 떠도는 사람들을 합친다면 대략 6,850만 명 ~ 7,149만 명 정도가 난민인 것으로 추산된다. 거대하게 불어난 난민의 규모는 더 이상 구호나 지원의 문제를 넘어서 각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48]

한때 난민정책을 두고 갈등하며 내각 붕괴 직전까지 갔던 독일은 기독사회당(CSU)과 기독민주당(CDU) 양측의 극적인 합의로 위기를 모면했다. 난민에 우호적인 메르켈 총리도 지난해 10월 유입 난민 수 제한과 오스트리아와 독일 국경에 통행소 설치, 새로 유입되는 난민의 최초 망명 신청국으로의 귀환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으며 내각의 분열을 가까스로 봉합하였다.[49]

하지만 독일에서는 지난 8월 하순경 난민에 의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난민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극우세력이 이끄는 이 시위에는 1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경찰 등 1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되었다.[50] 독일은 난민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귀감이 되어왔지만 이와 같은 시위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을 수용한 이후 독일에서 범죄가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미국 내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고, 메르켈 총리가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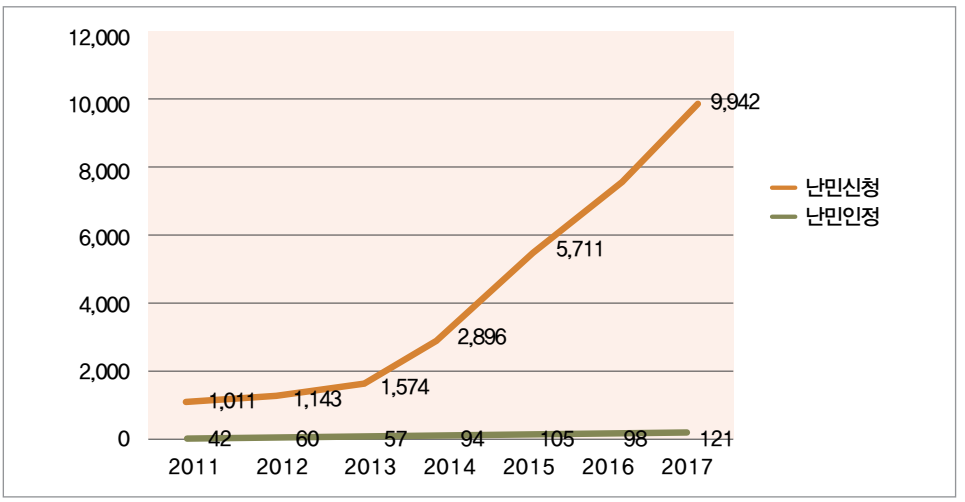
47)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9, 미래의 창, 2018. 265쪽.
48)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난민 7,000만 시대, 아시아 · 남미도 극우 정치 광풍 휩싸여", 중앙선데이, 2018. 11. 17.
49) "독일, '국경 통행소 · 추가 난민 귀환' 으로 난민정책 갈등 봉합", 이투데이, 2018. 7. 3.
50) "독일서 1만여 명 난민 찬반 맞불 시위…18명 부상", 뉴시스, 2018. 9. 2.

반박하고 나섰지만 독일 내 난민문제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51]

이러한 난민문제는 비단 국제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목적으로 예맨 난민 500여 명이 대거 입국하자 국민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민신청자는 2017년 9,942명으로 2011년 대비 무려 9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신청자 증가 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림 2-2-2] 연도별 난민 신청 및 인정 추이

(단위 : 명)



출처 : 난민인권센터(2017)

올해 대거 입국한 예맨 난민들의 경우 362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52]'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국민들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로 7월 경 제주도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맨 난민에 의한 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실종사건은 실족사로 마무리되었지만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난민에 대한 불안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난민 신청자는 해마다 2배씩 증가추세를 보여 2019년에도 난민 입국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19년에는 난민과 치안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51) "트럼프 '난민수용 독일 범죄증가' …메르켈 통계로 반박", 연합뉴스TV, 2018. 6. 20.

52) 난민 신청자 중에서 난민 요건(인종 · 종교적 박해 등)을 갖추지 못했으나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

Ⅲ. 2019년 치안환경 전망

2018년 주요 이슈였던 젠더이슈는 여전히 2019년에도 치안환경에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혜화역 시위는 2019년에 그 규모가 더 확대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성 대결적 양상은 더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결부하여 對여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현재보다 더 증대될 것이며, 관련 신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안환경에서 여성 대상범죄인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에 관한 대응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관련 범죄의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의 접근 역시 중요하므로 피해자 관련 분야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 고용불안의 지속과 소비자 물가 상승은 양극화를 더욱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 내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분노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생계형범죄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순찰강화 등 범죄예방 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범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범죄예방 기술 또한 치안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있어서는 새롭게 부상한 난민문제와 그동안 중요성이 간과돼 왔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치안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정보의 수집과 단속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치안전망」에서 다룬 치안환경 변화요인에 대한 STEEP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역시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인해서 노인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며, 노인대상 범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 거주 형태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증가는 여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치안 환경 변화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공통이슈였던 북한과의 관계도 치안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